

市금고 빅뱅 예고... 지방은행 안방 守城 ‘노심초사’

12월31일 5개 광역단체 계약 만료 시중銀, 지방銀보다 年출연금 3배 배점 낮아졌지만 실효성 의문 제기 금감원, 출연금 적정 산정 여부 조사

하반기 지방자치단체 시·도금고 선정을 앞두고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정부가 은행들의 출연금(협력사업비) 경쟁을 막기 위해 지자체 금고지정 기준안을 개선했지만 시중은행이 막강한 자금력과 유리한 금리를 내세우면 승자는 볼 보듯 뻔하기 때문.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출연금 산정여부를 조사하는 등 제도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구시, 울산시,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등 총 5개의 광역단체와 44개 기초단체가 12월 31일로 시도금고 계약이 만료된다. 대구시를 비롯한 5개 광역단체는 오

〈2019년 만기 지방자치단체금고 현황〉

자치단체(광역)		1금고	2금고
대구	본점	대구	NH농협
울산	본점	경남	NH농협
충남	본점	NH농협	KEB하나
경북	본점	NH농협	대구
경남	본점	NH농협	경남

／자료=행정안전부

는 9월까지 입찰공고를 내고 10월 시도금고 운영기관 선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지방은행 관계자는 “시금고 선정은 상대적으로 공무원 등 안정적인 고객을 유인할 수 있고, (신뢰도를 높여) 주민들이 주거래 은행을 바꿀 가능성이 높아 타은행 참여여부를 주의깊게 살펴보고 있다”며 “대출 등 이자이익에 대한 혜택뿐만 아니라 금융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

홍 JB회장도 간담회를 통해 “지자체 시금고 선정에 앞서 자주 지역에 내려가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며 열심히 응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기존에는 서울·수도권 지자체 금고는 시중은행이, 기타 지방 지자체 금고는 해당 지역에 기반을 둔 농협과 지방은행이 맡아왔다. 하지만 2012년 시도금고 은행 선정방식이 공개입찰제로 바뀌면서 시중은행들은 높은 수준의 출연금을 제시하며 지방 지자체 시금고 탈환에 성공하고 있다. 출연금은 은행이 지자체 금고 선정 시 지역발전기금으로 제공하는 기부금을 말한다.

현재 전국 243개 지자체 금고 중 농협은행이 165개(68%)로 가장 많은 금고를 가지고 있다. 신한·KB국민은행·KEB하나은행·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은 43개(18%), 지방은행은 35개(14%) 순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과도한 출연금 경쟁을 막기 위해 지자체

금고지정기준 세부내용을 포함한 평가항목 6개의 배점을 개선했다. 지자체 출연금 선정 시 출연금(협력사업비)에 대한 배점은 4점에서 2점으로 낮추고, 지자체 예금금리에 대한 배점은 15점에서 18점으로 높였다.

기타 사항이던 자치단체 자율항목도 총 9점에서 11점으로 늘렸다. 이 항목에는 금융위원회가 시행하는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도 포함한다. 지역에서 수취한 예금을 지역 내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 대출 등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평가하겠다는 것. 상대적으로 지역 대출 비중이 높은 지방은행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복안이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개선책은 효력이 없다고 지적한다. 출연금 배점과 금리에 대한 배점이 존재하는 한 승자는 시중은행일 수밖에 없다는 것. 실제로 시중은행이 연간 지출하는 출연금은 지방은행의 3배 이상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4대시중은행의 출

연금은 총 680억원인데 비해 5대 지방은행(부산 대구 경남 광주 전북)은행은 228억원에 불과하다.

금리배점과 관련해서 기반지역을 바탕으로 연체율이 늘어나 건전성 관리에 집중해야 할 지방은행보다 시중은행이 더 좋은 조건으로 금리를 제시할 수 있어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의 지자체 금고 출연금이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정부는 은행법상 출연금을 리베이트로 규정해야 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은 규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출연금 배점을 낮추는 식으로는 경쟁을 막을 수 없다”며 “출연금 항목을 제외하고, 지자체가 출연금이 필요하면 해당 은행들과 출연가능 여부를 합의하는 방식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웰컴저축銀, 업계 최초 ‘해외송금 서비스’

9월까지 수수료 무료 이벤트

웰컴저축은행이 15일부터 저축은행 최초로 해외송금 서비스를 시작한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웰컴저축은행은 해외송금업체 센트비(SENTBE)와의 제휴를 통해 자사의 모바일플랫폼인 웰컴디지털뱅크(웰뱅)로 해외송금 서비스를 선보인다.

웰컴저축은행 수시입출금계좌를 보유하면 웰뱅을 통한 해외송금이 가능하며, 타행 계좌로 이체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비밀번호 6자리만 누르면 송금이 가능하도록 간편하고 직관적으로 구성했다.

해외송금에 따른 수수료도 최저수준으로 책정해 9월 30일까지 무료로 제공되며, 이후 1건당 최저 3000원 수준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송금액에 따라 5000원에서 1만원, 케이뱅크는 일괄 4000원, 핀크는 일괄 5000원의 해외송금수수료를 받는 것을 고려하면 인터넷전문은행에 비해 저렴한 수준이다.

해외송금이 가능한 국가는 미국·일본·동남아시아 등 세계 16개국으로 1건당 최저 3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송금 가능하다. 웰뱅을 통한 해외송금은 16개국의 현지 은행계좌에 해당국가 화폐로 환전돼 실시간으로 입금 되고, 송금



웰컴저축은행 본사 전경.

받은 수취인은 곧바로 계좌에서 출금 가능하다. 서비스 국가에 따라 ATM 기기에서 수취하거나 환전소 등에서 직접 외화 수령이 가능하며, 일부국가에서는 자택배달도 가능하다. 해외송금을 이용한 고객에게 300만원 상당의 경품 추첨을 통해 제공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한편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자산규모 1조원 이상 저축은행에 대해 건당 5000달러, 연간 5만달러 범위로 해외송금·수입업무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저축은행 업계는 이같은 규제완화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점 수의 한계와 적은 방문객, 해외송금 시장의 치열한 경쟁에 따라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계산에서였다. 현재까지 웰컴저축은행을 제외하고 해외송금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저축은행은 OK저축은행과 SBI저축은행 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민영 기자 hong93@

어린이 화폐·경제·미술교육 ‘한 눈에’

한은, 하계 어린이 박물관교실 개최

한국은행은 화폐박물관이 다음 달 6일부터 9일까지 4회에 걸쳐 ‘2019년 하계 어린이 박물관 교실’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어린이 박물관 교실은 어린이들이 화폐와 경제에 대해 친근감을 느낄 수 있

도록 화폐박물관 견학, 경제교육, 미술 체험 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동반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도 실시된다.

참가비는 무료다. 다만 과거 3년 이내 참가한 경험이 있는 어린이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한은 화폐박물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김희주 기자

김광수 “디지털·혁신금융·자산관리 가속화”

〈NH농협금융 회장〉

상반기 경영성과 분석회의 “경영체질 개선 효과 실적으로”

NH농협금융은 지난 12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자회사 최고경영자(CEO) 및 주요 경영진 100여명과 함께 ‘2019년 상반기 경영성과 분석회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김광수 농협금융 회장은 “지난해부터 전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영체질 개선의 효과가 점차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전 임직원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농협금융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혁신금융 활성화 ▲자산관리 역량 강화의 3가지의 추진 전략을 구체화하고 속도감 있게 실행에 착수하기로 했다.

먼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상품 위주의 디지털화에서 벗어나 전략, 상품 개발, 마케팅, 업무 프로세스 등 전 부문에 걸친 디지털 금융회사로의 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8월까지 전략과 실행방안을 구체화해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길 예정이다.



김광수 NH농협금융 회장이 지난 12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열린 ‘2019년 상반기 농협금융 경영성과 분석회의’에 이 임직원들에게 당부의 말을 하고 있다. /NH농협금융

혁신금융 활성화 방안으로는 그룹 차원의 벤처캐피탈 활성화와 전반적인 기업금융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벤처캐피탈 활성화는 농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해 활성화하고, 디지털산업 중심의 혁신산업에 투자해 미래 성장기반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산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고객과 농협금융의 동반 성장을 위해 은행·증권·자산운용의 시너지 클러스터를 더욱 단단히 결합하고, 자산관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관리 역량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경기둔화 가능성과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일본의 수출제한 등 하반기 리스크 잠재요인의 영향과 대응방안을 면밀하게 점검했다.

김 회장은 “농협금융의 존재 및 성장기반의 핵심은 농업과 농업인, 그리고 고객”이라며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고객과 농업인의 관점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국민의 농협 구현을 위해 농협금융이 앞장 서줄 것”을 당부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MRI 검사·소견 없어도 보험금 받는다”

금감원 Q&A 치매보험금

Q. 치매전문에게 치매진단을 받았는데도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주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MRI(자기공명영상), CT(컴퓨터단층촬영) 등 뇌영상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있어야 보험금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아직 경미한 치매라서 MRI 상의 이상 소견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 이제부터는 MRI 검사결과 등을 통해 치매판정을 받지 않아도 치매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MRI 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금융감독원에서 관련 보험약관을 개선했기 때문입니다. 기존 보험가입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치매전문 의사가 환자의 인지기능이나 정신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치매라고 진단했다면 MRI 소견이 없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에게 치매전문의를 진단내용을 요구할 수 있어 조금 번거로운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부 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로 선량한 다수가 납부하는 보험료가 높아지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입니다.

또 병원으로부터 어떤 질병코드를 부여받았는지, 치매 관련 약을 얼마나 처방받았는지 등과 무관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이러한 보험금 지급조건을 삭제하고 그에 따라 전문의의 치매진단이 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조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했습니다. /김희주 기자 hj9@